

지방정부서비스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주거영역 삶의 질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김병섭**
강혜진***
김현정****

〈目 次〉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선행연구 검토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III. 연구설계	

〈요 약〉

본 연구는 지방정부서비스 만족도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삶의 질의 조절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서비스와 행복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직선관계를 가정하고, 개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의 수준에 따라서 관계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스털린과 빈호벤의 효용에 대한 상대성과 절대성 논쟁은 바로 이 조절효과에 대한 논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거 상태 삶의 질 수준에 따라서 주거 관련 지방정부 서비스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전국 단위 서베이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 서비스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민들의 행복도가 올라가는 것과 함께, 삶의 질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서 지방정부 서비스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절대적 효용이론과 상대적 효용이론이 모두 타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가 정책을 실시할 때 정책대상 집단에 따라서 개입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주제어: 행복, 삶의 질(quality of life), 지방정부 서비스, 상대적 효용이론, 절대적 효용이론, 정책대상, 스테레오타입 로지스틱(stereotype logistic)】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2S1A3A2033822). 논문에 유익한 심사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겸무연구원(bskimm@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수료(arahan78@nate.com)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수료(heymole@snu.ac.kr)

논문접수일(2015.6.14), 수정일(2015.6.28), 게재확정일(2015.7.2)

I. 서론

개인 행복의 증진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인가? 정치적 의제로서의 국민행복에 대한 관심은 18세기의 제레미 벤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Prycker, 2010: 587), 최근 행복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국민행복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예: Dolan & Peasgood, 2006; Duncan, 2010; Hirata 2005; Layard, 2006).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Prycker는 행복이 더 이상 철학이나 종교, 혹은 세평(common talk)에 막힌 주제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Prycker, 2010: 585).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2년 말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후 행복은 추상적 슬로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정과제에도 반영되고 있다.²⁾ 이와 함께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경인일보 2014. 12. 4일자 보도).³⁾

정부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런 의문은 자연스럽게 영향요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행복의 영향요인을 찾으려는 많은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제시되는 변인은 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변수이다(Hagerty & Veenhoven, 2003; Tsui, 2014; Veenhoven, 2004 등). 물론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 제시된 이후, 절대적인 소득에서 상대적인 소득, 다시 말해 불평등의 문제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득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Ball & Chernova, 2008).

이렇게 소득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 이외에도 교육, 환경, 안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의 주관적 만족감도 영향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예: Mohanty, 2014). 이에 정부는 국민 삶의 주관적 만족감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하게 된다.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이나 정부의 정책 또는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그 효과에 경험적으로 규명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예: 고명철, 2013a; 이태중·

2) 박근혜 정부 “4대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을 4대 국정기조로 삼고 140개 국정과제로 세분화되어 있다(업코리아 2015. 1. 12일자 보도).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7266> (접속일 2015. 1. 15)

3) 경인일보. “박근혜 대통령 “중앙·지방, 국민행복 위해 힘모아야”(2014. 12. 4일자 보도).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921964> (접속일 2015. 1. 15)

박철민·송건섭, 2000; 이영균·김동규, 2007; 이현국·이민아, 2014; 우창빈, 2013; 하혜수, 1996; 허철행·김도엽, 2000 등).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관계는 직선적인 것이다. 가령, ‘특정한 정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와 같은 식의 결론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소위 이스털린의 역설 때문이다. 즉, 소득이 행복에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늘어날수록 행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스털린의 역설 때문에 행복연구가 활발해졌는데, 이렇게 만약 일정한 정도 이상의 소득이 행복을 더 이상 증진시키지 않는다면, 일정한 정도의 불평등 감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정부서비스도 더 이상 행복을 증진시키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줄이면 행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가?’, ‘정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 행복이 지속적으로 증진되는가?’ 하는 의문에 부딪힌다. 특히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행복이 증가한다는 반론이 제기된 이후, 그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Easterlin, 1974; Easterlin, 2001; Hagerty & Veenhoven, 2004; Veenhoven, 1991)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부서비스와 국민행복이라는 두 변수 간 관계의 선형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선행연구로서 첫째, 행복 및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둘째 행복에 관한 이론 등을 살펴본 다음, 셋째 이론들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지방정부서비스와 국민행복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가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행복과 삶의 질

행복의 정치(politics of happiness)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혼재(Prycker, 2010: 590-592)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과학의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행복에 대하여 경제학, 심리학, 인지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왔으며, 행정학을 비롯

한 정책적 접근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행복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로서 개인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철학에 영감을 얻은 계몽주의자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이자,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사회적 목표라고 믿었다(Prycker, 2010: 587).

이렇게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어서 그런지, 행복은 여러 가지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는 삶의 질,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와 행복을 분리해서 접근하기도 하고, 같은 개념 내지 비슷한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삶의 질을 더 넓은 개념으로 보고 행복을 그 하위 구성개념으로 보기도 하고(Veenhoven, 2001), 행복을 전반적 만족감(overall satisfaction)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여러 영역의 삶의 질을 그 구성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고명철, 2013b; Veenhoven, 2000; Stenner et al., 2003). 또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을 행복과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의 포괄 용어(umbrella term)로 보기도 하고(Welsch, 2009), 삶의 질을 주관적 웰빙이나 행복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보기도 한다(Philips, 2006). 이러한 개념의 혼용 때문에 행복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삶의 질을 연구하고 있거나, 또는 주관적 웰빙이나 주관적 만족감 연구를 행복 연구로 보기도 한다(데릭 보크, 2011: 33).

하지만 삶의 질과 행복은 등치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삶의 질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측정되지만, 행복은 개인의 심리적, 감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행복과 삶의 질의 교차점을 찾는다면 주관적 지표 부분인데, 후자가 객관적 상태에 대한 인지적 평가라면 행복은 이러한 평가와 관련은 있으나 독립적인 감정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행복한 빈자(happy poor)”가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고 이를 주관적으로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Philips, 2006: 31). 물론 그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객관적 상태와 그것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2. 행복이론: 상대적 효용과 절대적 효용

한 개인이 처해있는 객관적 삶의 질과 그것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행복하다고 여기고 또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은 ‘물리적 조건’, 그리고 이에 대한 ‘인지적 평가(cognitive evaluation)’, 그리고 ‘정서적 평가(affective evaluation)’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현재 이러한 관계에 대한 논의는 크게 하향이론과 상향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향이론에서는 한 개인은 그가 부딪히는 삶의 질의 객관적 상태 및 이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무관하게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행복하게 생각하고,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매사를 불행하게 생각한다. 전자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stressful life events)이 발생하여도 이를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기도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단련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 사람은 외부 환경이나 물리적 조건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격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내적 속성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을 행복의 특성이론(trait theory)이라고 한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감각적인 경험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조직한다는 칸트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구재선·김의철, 2006). 어떤 경험이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이 오히려 경험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를 하향이론(top-down theory)이라고 한다(Heady et al., 1991).

위의 하향이론과 달리 상향이론은 객관적 조건 및 인지적 평가와 행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개인의 주관적·인지적 경험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고 본다. 즉 즐거운 경험은 행복으로, 불쾌한 경험은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욕구(또는 욕망)이론(need/desire theory)은 즐거운 경험이 생기는 경우를 욕구 또는 욕망의 충족 여부로 보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한다(Diener,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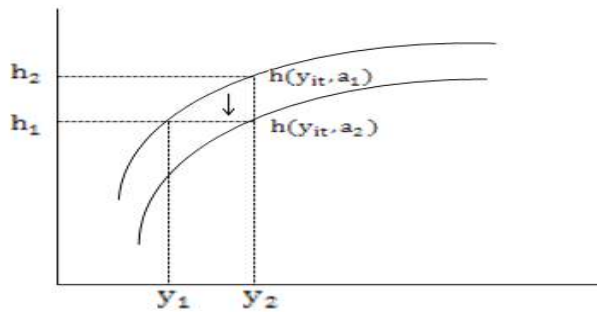
이러한 상향이론은 다시 크게 두 그룹, 즉 이스털린 그룹과 빈호벤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이들은 개인이든 국가든 성취하고자 하는 객관적 상태가 더 나은 물질적 풍요라는 점을 공유한다. 그리고 한 나라를 단위로 특정한 시점에서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더욱 행복하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 한다. 즉 경제적 욕구의 충족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상향이론의 기본 전제를 공유한다. 그러나 시간의 길이를 길게 할 경우에도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진다.

먼저, 이스털린과 그의 동료들은, 시간의 길이를 길게 보면 소득의 증가로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Easterlin, 1974, 1995, 2001, 2013; Easterlin & Sawangfa, 2010; Easterlin et al., 2011). 소득이 증가해서 필요한 것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본래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쾌락의 쳇바퀴(hedonic treadmill)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이들은 상대효용이론(theories of relative utility)으로 설명했다. 즉, 행복은 욕망의 충족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와 어떤 기준(가령, 다른 사람, 과거의 삶, 또는 기대수준 등)과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욕망의 충족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말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30평형대 주택을

구입하여 주거 관련 욕구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40평형대에 살고 있는 친구와 비교하게 되면 행복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 사람이 과거 20년 전에 월세로 살다가 10년 전에 20평형대 살고 있었는데 지금 30평형대 살고 있다면, 식구가 많아서 이것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나아진 상태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당연히 특정한 기준과 비교할 때 현재의 상태가 달라진 것이 없으면 행복도 달라질 것이 없다. 이렇게 비교이론은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를, 경제가 성장하여 개인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으나 다른 사람들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측면에서 그 지위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Easterlin, 1995).

소득이 증가하여도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기대(또는 열망)수준도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망수준(a_1)이 일정할 경우 소득이 y_1 에서 y_2 로 증가하면 행복은 h_1 에서 h_2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소득의 증가와 함께 사람들이 기대하는 열망수준도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a_2), 행복은 h_1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열망의 쳃바퀴(aspiration treadmill)라고 한다(McBride, 2010).

〈그림 1〉 소득과 열망수준으로 본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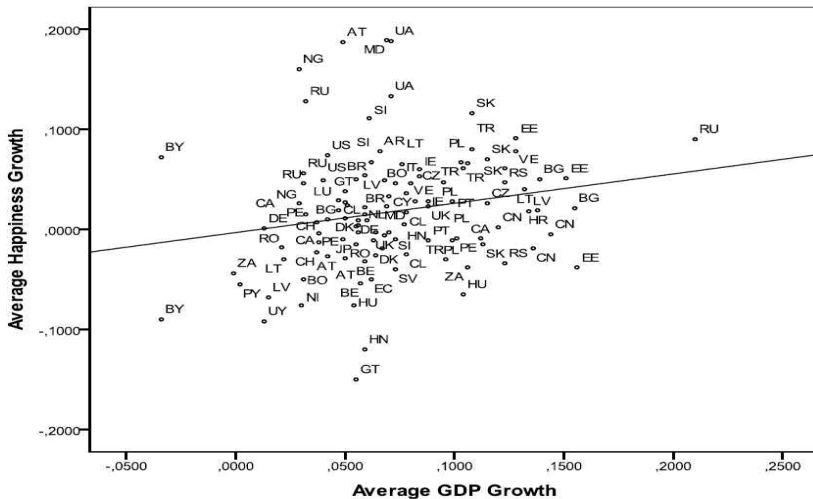
출처: McBride, M. (2010: 265)를 토대로 일부 수정.

이와 같이, 이스털린과 그의 동료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객관적 상태가 충족된 것을 주관적으로 인지하여 행복 수준이 일정한 시간 증가하더라도, 긴 시간의 과정에서 보면 적응과 비교라는 과정을 거쳐 본래의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에 대해, 빈호벤과 그의 동료들은 시간의 길이를 길게 잡아도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이 늘어난다고 한다(Hagerty & Veenhoven, 2003; Veenhoven, 1991; Veenhoven & Hagerty,

2006; Veenhoven & Vergunst, 2014). 그 이유를 이들은 절대효용이론(theory of absolute utility)으로 설명한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의 길이를 길게 잡아도, 지속적인 소득의 증가는 추가적 욕구의 충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행복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Hagerty & Veenhoven(2003)은 1958년부터 1996년까지의 21개 국가를 시계열로 연구한 결과, 국민소득의 증가는 국민행복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평가할 때가 장기적인 경우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Veenhoven & Vergunst(2014)은 대상국가를 67개로 늘리고, 연구기간도 짧은 것은 10년으로부터 긴 것은 40년 이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성장률과 국민의 행복 증가율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Howell & Howell(2008)은 이러한 관계가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보다는 낮은 나라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림 2> GDP성장률과 행복의 증가율의 국가간 연구



출처: Veenhoven & Vergunst (2014: 33).

국민소득과 국민행복간의 이러한 논쟁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대한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받아들여, 행복을 국정의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왔다. 즉, 경제성장이 아닌 국민행복 중심의 국정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다. 빈호벤과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 이러한 논쟁은 독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007년

Stiglitz 보고서가, 기존의 GDP를 발전의 지표로 삼는 것은 이제 넘어서야 한다는 ‘Beyond GDP’를 제창한 이후, 이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OECD가 ‘보다 나은 삶(Better Life)’을 대안적 지표로 제시하고, UN이 직접적으로 세계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매년 발표하면서 바람직한 국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보다 분명하게 계속되고 있다.

3. 지방정부서비스와 행복

위와 같은 논쟁은 국내에서도 당연히 성장지향적인 보수와 복지지향적인 진보 간 정책 방향에 대한 대립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효용의 상대성과 절대성 여부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복연구는 대체로 효용의 절대성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행복도 또한 늘어난다는 식이다. 정부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이 증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것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확인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지방정부서비스를 중심으로 행복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연구는 대부분 효용의 절대성에 기초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하혜수(1996)는 한국의 43개 시정부를 대상으로 서비스수준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허철행·김도엽(2000)의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가 주민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영균·김동규(2007)는 성남시 거주 시민들의 경우 삶의 질 영역 중 자연환경 및 교통여건, 환경관리적 여건, 시장·금융서비스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총체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고명철(2013a)은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정부성과와 삶의 질의 인식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면서, 정부성과가 서비스만족도를 삶의 질에 매개하는 역할을 상향확산이론을 토대로 설명하였다. 이현국·이민아(2014)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정부가 제공하는 24개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성과 인식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업문제해결 및 경제활성화, 대중교통서비스, 쓰레기 수거와 분리수거, 문화활동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높게 인식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

4) 중앙일보, “‘소득 늘어난 만큼 행복해진다’ … 메르켈 독트린 뿌리째 흔들어” (2013. 10.5 일자 보도).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10/05/12366293.html?cloc=nnc&total_id=12772364 (접속일 2015. 1 15)

게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지방정부 서비스와 삶의 질 내지 행복의 관계를 우상향하는 선형 관계로 보고 있다. 과연, 이와 같이 정부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민의 행복은 증진되는 것일까? 아니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선에 대해서 처음에는 만족하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그에 대한 쾌락이 약화되고 그래서 행복이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행복의 쳇바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아니면 개선된 서비스로 인해서 기대하는 열망 수준도 또한 올라가서 행복이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까? 행복에 관한 상대효용과 절대효용이론의 논쟁에 의하면,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즉 절대적 효용이론에 의하면, 어떤 개인이 자신의 객관적 삶의 질을 만족스럽게 인지하더라도, 정부서비스에 만족하면 할수록 그러한 사람은 행복을 더욱 크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 효용이론에 의하면, 어떤 개인이 자신의 객관적 삶의 질을 만족스럽게 인지할 경우, 그러한 상태를 제공하는 정부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더라도 그것이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대립적인 설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한 개인의 삶의 질이 정부서비스와 행복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4. 주거 관련 정부서비스, 삶의 질, 그리고 행복

위와 같은 가설적 설명을 검증하는데 삶의 질 영역을 전부 다 연구하는 것은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 중의 하나인 주거 관련 삶의 질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와 관련한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경우, 주거와 관련된 지방정부서비스의 만족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주거 관련한 삶의 질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주거 관련 삶의 질 수준이 낮다는 보고가 있다. 한국은 OECD가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보다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회원국 중에 최하 수준의 주거만족도(satisfaction with housing conditions)를 기록하고 있다. OECD 보고서는 이러한 낮은 수준의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지표 수준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⁵⁾

둘째, 이러한 주거 관련 삶의 질은 주거 영역의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상태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지만, 이는 여러 가지 정부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서비스라고 하면,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등의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시설’에

5) OECD 홈페이지 참조.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접속일 2015. 2. 3)

대한 이용을 포함한다(하성규, 1998: 14-15).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주거영역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되는 영역은 ‘대기질 및 수질’, ‘공원 수’, ‘소방, 경찰 등의 정부서비스’와 ‘여가시설’, ‘범죄율’, ‘교통여건’, ‘자연환경’, ‘공립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요인들이 제시된다(이태중 등, 2005; 조경호·김미숙, 2000; Grzeskowiak et al., 2003; Hovik, 1992; Michalos & Zumbo, 1999 등). 이렇게 보면 주거 관련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관여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와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주거 선택요인과 주거 관련 서비스는 관련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거 선택요인에서도 직장과의 거리요인 외에도 근린환경, 학교의 질, 범죄율 등과 같은 해당 주거입지 지역의 공공서비스 요인 등에 대한 평가결과 등이 제시되고 있다(Martin et al., 1993). 실제로 한국에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쓰레기, 자연환경, 대중교통, 도로상태, 공공도서관, 공원, 문화활동 여건, 상하수도, 치안, 119소방방재,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보육시설, 쇼핑여건, 취업여건, 병원의료시설 등 16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취업여건과 병원의료시설을 제외한 주거 관련 정부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높은 생활밀접도를 가진다(이현국·이민아, 2014)는 측면에서도 주거 관련 삶의 질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주거문제는 정부가 정책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문제는 매 정권마다 주요 현안으로 제시할 만큼 오래된 사회적 난제 중 하나이다. 더욱이 정부는 주로 주택 공급의 수급, 즉 양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도외시된 측면이 있다. 그마저도 양적 부분에서 정부가 제시한 정책 대안은 의도한 효과를 가져 온 역사가 거의 없다. 이처럼 국민의 주거생활은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부각되지만 정부의 개입의 효과에 있어서는 늘 한계가 목도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주거 영역에서의 역할은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 삶의 행복을 구성하는 함수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이론과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영향요인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상대적 효용이론과 절대적 효용이론 중 어느 쪽이 한국인들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이론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서비스와 행복의 관계와 여기에서의 삶의 질의 조절작용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전국 단위의 대규모 서베이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절대적 효용이론이 옳다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를 향유하는 국민들의 행복수준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서비스의 수준이 객관적으로 높아져

도 주민들의 인지적 평가는 다르게 나타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설1]은 이를 좀 더 분명하게 하고자,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하여 보다 높은 만족을 보이는 시민들의 행복 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상대적 효용이론이 옳다면,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와 행복과의 관계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즉, 쓰레기 수거나 대중교통 등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관련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훌륭한 주거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의 만족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주거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정부 서비스의 만족 여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즉 지방정부서비스와 개인의 주거상태의 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바로 이 주거 삶의 질 수준에 따라서 지방정부서비스와 행복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가설2]는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각 개인의 삶의 질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가설을 구성하였다.

연구가설1.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주거 관련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시민의 행복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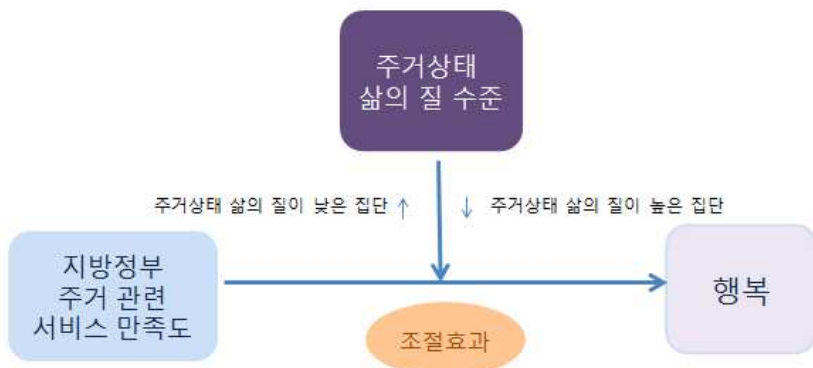
연구가설2. 지방정부 주거 관련 서비스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들의 주거관련 삶의 질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종속변수로 하고, 주거서비스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지방정부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거관련 삶의 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 <그림 3>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을 간략한 회귀식 형태로 표현 하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분석모형

$$\text{happiness} = \beta_0 + \beta_1(\text{주거 관련 정부 서비스 만족도}) + \beta_2(\text{주거상태 삶의 질}) + \beta_3(\text{주거 관련 정부 서비스 만족도})(\text{주거상태 삶의 질 높은 집단}) + \beta_4(\text{주거 관련 정부 서비스 만족도})(\text{주거상태 삶의 질 낮은 집단}) + \beta_5(\text{연도더미}) + \beta_6(\text{지역더미}) + \beta_7 X_i + \epsilon_i$$

X_i = 연도 및 지역 이외의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효과인 주거 관련 정부 서비스 만족도의 한계효과는 주거 관련 정부 서비스 만족도 항에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여, 1) 주거 상태 삶의 질이 높은 집단의 서비스의 행복에 대한 효과는 β_1 에 β_3 를 합한 값으로, 2) 주거 상태 삶의 질이 낮은 집단의 서비스의 행복에 대한 효과는 β_1 에 β_4 를 합한 값이 된다. 따라서 β_3 와 β_4 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서 서비스 만족도와 행복의 관계가 조절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행복에 대한 다른 영향요인들이 제3의 설명변수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데릭 보크, 2011); Hagerty & Veenhoven, 2003; Tsui, 2014; Veenhoven, 2004 등)에서 행복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사회경제적 변수(예: 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 성별, 정치적 이념, 종교, 혼인상태, 직업 등)를 포함시켰다. 소득은 행복의 영향요인으로 꾸준히 제시되며 강한 설명력을

6) 데릭 보크는 행복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결혼, 인간관계, 직장, 건강, 종교나 신념, 정부의 질의 6가지를 들고 있다.

가지는 변수로 관심을 받았으며(Ball & Chernova, 2008; Lucas, 2004; Ram, 2009 등), 교육 수준도 높을수록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ll & Chernova, 2008). 연령과 성별 역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다양한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지만(Andrew & Whitley, 1976; Campbell et al., 1976 등), 해당 변수와 행복의 관계는 방향성이 일관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정치적 이념(Dreher, A. & Hannes, 2011), 종교 및 혼인상태, 직업 등의 요인(데릭 보크, 2011 등)들도 여러 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수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행복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이와 관련한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2. 자료 및 측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궤렵에 의뢰하여 실시한 ‘삶의 질과 정부역할에 관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3년에 실시한 해당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 행복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먼저 2013년 상반기에 실시한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제주와 전국 8개 도의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크기는 표본추출 방법, 조사비용, 조사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총 10,450명을 총 목표 표본수로 진행하였다.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서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하여 이 세 변수를 이용한 모집단의 세부층화를 나누었다. 표본의 배분은 일반시를 100표본씩 배분하여 74개 일반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100표본씩 균등 배분하여 총 7,400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특별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3,000 표본 내외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례배분과 제곱근 비례배분을 검토한 후 제곱근 비례배분으로 결정하여 3,050 표본을 확보하였다. 특별 및 광역시 내에서 구 수가 가장 작은 경우인 5개 이하 지역, 구별 조사구 수가 많은 경우인 6개 이상의 경우에는 지역 인접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별로 할당된 후 지역 내에서 성별·연령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배분하였다.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 방식은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RDD의 Dual Frame의 전화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추출방식은 지역·성·연령별 할당 표본추출(quota sampling)로 2012년 12월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준거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는 가구채택률을 감안하여, 오후 2~6시까지의 휴대전화 RDD에 의한 진행을, 저녁 6시~밤

9시까지의 가구 유선전화 RDD에 의한 진행을 하였다. 실사는 한국갤럽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총 23일간 진행하였다.

2013년 하반기 조사는 이전 조사에서 제외되었던 군지역과 제주도, 서울특별시에 추가 표본을 확보하여 진행되었으며, 표본추출 방법, 조사비용, 조사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총 10,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외 조사 방식은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체 자료의 표본수는 21,050명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한 데이터는 서베이를 통하여 수집된 응답이다. 따라서 서베이를 통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함께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다(Podsakoff & Organ, 1986).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를 근거로 하여 동일방법편의의 해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째, Meier & O'Toole Jr.(2013)의 연구가 제시하듯이 서베이가 정보 수집을 위한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직무만족이나 행복과 같이 다른 방식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의 경우에 자기보고식 방식은 의미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지역 단위로 변환하여 시군구 단위별로 경성 데이터(hard data)와 연결해서 분석해 보았을 때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였다⁷⁾는 점 역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체계적 편의(systemic bias)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설문조사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여 설문의 다른 항목(중앙정부 및 광역, 기초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에서 설문의 순서를 달리하였으며, 설문 결과 분석을 통하여 응답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한 결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일방법편의의 해결 방식에 있어서 통계적·절차적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Podsakoff & Organ(1986: 536-540)에서 언급된 방법의 하나로서 동일방법편의의 극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 변수 측정

이러한 설문 가운데서 본 연구는 행복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주거 관련 서비스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양자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 주거영역 삶의 질의 수준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의 측정은 아래 <표 1>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핵심 종속변수인 행복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7) 중앙SUNDAY-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기획. 전국 지자체 평가 결과 참조.

http://sunday.joins.com/article/list.asp?page=2&cat_code=010600&start_year=2014&start_month=01&end_year=2015&end_month=02&press_no= (접속일 2015. 2. 5)

하여 1점에서 5점으로 갈수록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로 행복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주거관련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쓰레기, 자연환경, 대중교통, 도로상태, 공공도서관, 공원, 문화활동 여건, 상하수도, 치안, 119소방방재,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보육시설, 쇼핑여건의 14개 서비스 영역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변수의 신뢰도를 크론파하 알파값으로 분석해 본 결과, 0.8299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김병섭, 2008: 521).⁸⁾ 조절변수로서의 주거영역 삶의 질은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하여, 1점에서 5점으로 갈수록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으로 측정하였다. 조절작용을 살펴보기 위한 상호작용항을 만들기 위하여 해당 변수를 주거영역 삶의 질 상위집단, 보통, 하위집단의 세 카테고리로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실제 분석에 상호작용항은 상위집단 더미와 주거서비스 만족도를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구성하고, 하위집단 더미와 주거서비스 만족도를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성별, 연령, 정치적 이념, 종교, 혼인 상태,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변인과 지역의 크기에 따른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소득수준은 응답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으로 100만원부터 600만원 이상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졸업부터 대학원 이상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성별은 응답자의 성별을 남성을 기준으로 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고,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을 연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정치적 이념은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자기 기입방식의 응답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종교는 종교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직업은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를 기준으로 더미변수 2개로 측정하였으며, 혼인상태는 미혼과 이혼의 경우에 대하여 기혼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가족수는 본인 포함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를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지역변수는 특별 및 광역시 지역과 일반시, 군지역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보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2개 만들어서 모형에 포함시켰다.

8) 실제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의 신뢰도 계수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Peterson(1994)이 조사하였더니, 전체 4,286개의 알파계수는 0.06에서 0.99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값은 0.77로 조사되었다고 한다(김병섭, 2008: 521 재인용).

〈표 1〉 변수의 측정

	변수명	조작적 정의	측정
종속 변수	행복	개인의 행복감	1=전혀 행복하지 않음, 2=행복하지 않은 편, 3=보통, 4=행복한 편, 5=매우 행복(원자료에서 역코딩)
독립 변수	주거서비스 만족도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주거 관련 서비스 14개 영역 ⁹⁾ 에 대한 만족도	1=전혀 만족하지 않음, 2=만족하지 않는 편, 3=보통, 4=만족하는 편, 5=매우 만족(총 14개 문항을 원자료에서 역코딩하여 평균값 사용)
조절 변수	주거 관련 삶의 질	주거상태에 대한 삶의 질 수준	1=전혀 만족하지 않음, 2=만족하지 않는 편, 3=보통, 4=만족하는 편, 5=매우 만족(원자료에서 역코딩) 주거 관련 삶의 질 수준이 낮은 집단 ¹⁰⁾ =1, else=0 주거 관련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집단 ¹¹⁾ =1, else=0
통제 변수	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더미	특별시 및 광역시=1, 기타지역=0
		일반시 더미	일반시=1, 기타지역=0
	연령	응답자의 연령	연속변수
	소득 수준	응답자의 월가구 평균소득	1=99만원 이하, 2=100만원~199만원, 3=200만원~299만원, 4=300만원~399만원, 5=400만원~499만원, 6=500만원~599만원, 7=600만원 이상
	교육 수준	응답자의 최종학력	1=초졸 이하, 2=중졸, 3=고졸, 4=대졸, 5=대학원 이상
	성별	응답자의 성별	남성=1, 여성=0
	정치적 이념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	1=매우 진보적, 2=다소 진보적, 3=중도, 4=다소 보수적, 5=보수적
	종교	종교 유무	종교 있음 ¹²⁾ =1, 없음=0
	혼인 상태	결혼 여부	기혼=1, else=0
	가족수	본인 포함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	연속변수
	화이트 칼라	응답자의 직업군이 화이트 칼라인지 여부	화이트 칼라 ¹³⁾ =1, else=0
	블루 칼라	응답자의 직업군이 블루칼라인지 여부	블루칼라 ¹⁴⁾ =1, else=0

9) 쓰레기수거 및 거리의 청소상태, 대기 등 자연환경, 대중교통 서비스, 도로상태, 공공도서관, 문화 활동 여건, 공원 및 여가시설, 상하수도, 치안 및 사회질서, 119 소방방재서비스, 아동·노인·장애인 여성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교육시설,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시장·마트·백화점 등 쇼핑여건

10) 1과 2로 응답한 경우로 구성

11) 4와 5로 응답한 경우로 구성

12) 기독교, 불교, 가톨릭, 기타 종교

13)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정부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및 스테레오타입 로지스틱 분석결과

분석결과는 1)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결과, 2) 스테레오타입 로지스틱 분석결과, 3)한계효과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행복의 평균치는 5점 만점에 3.66으로 보통보다는 행복한 편이며, 주거 관련 삶의 질은 3.57, 주거 영역 정부서비스 만족도는 3.4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기초통계분석 결과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행복	21004	3.66	1.00	1	5
특별 및 광역시더미	21050	0.27	0.45	0	1
일반시더미	21050	0.35	0.48	0	1
연령	21050	51.50	16.62	19	97
성별	21050	0.49	0.50	0	1
교육수준	20911	2.90	1.15	1	5
소득수준	19867	3.50	2.02	1	7
가족수	20940	3.09	1.36	1	12
정치적 이념	18860	3.15	1.05	1	5
결혼여부	21037	0.77	0.42	0	1
종교여부	20994	0.55	0.50	0	1
블루칼라	20963	0.23	0.42	0	1
화이트칼라	20963	0.20	0.40	0	1
주거 관련 서비스만족도	15264	3.48	0.62	1	5
주거영역 삶의 질	21019	3.57	1.00	1	5

다음은 스테레오타입 로지스틱 분석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매우 행복하다’, ‘행복한 편이다’, ‘보통이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로 순서화된 자료이다. 이런 경우에 OLS를 사용하여 분석하기도 하지만, 편의 발생의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응답은 확률 개념으로 처리를 하여 모형을 구성한다(이성우 등,

2008: 142). 이런 경우 주로 사용하는 분석방식은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다. 하지만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parallel regression”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parallel regression assumption”은 순위응답변수(ordered response variable)에서 각 독립변수의 모수추정치는 각 범주에 따라서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이며, 이것에 위배될 경우에는 대안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Brant test(Brant, 1990)를 실시하였고¹⁵⁾, 그 결과 이 가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스테레오타입 로지스틱 모형(SLM, Stereotype Logistic Model)을 선택하였다(Anderson, 1984), 스테레오타입 로지스틱 모형은 순위 변수에 응답자들의 응답이 각 카테고리 별로 구분하고 응답했는가의 문제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비선형(non-linear)관계를 가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스테레오타입 로지스틱 모형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Wald χ^2 를 통해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데이터와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SLM을 사용한 이유인 “parallel regression”의 위배에 대해서는, 선택한 모형의 분석결과 중에 응답 패턴에 대한 응답자들의 구별 여부를 <표 4>의 ϕ 값에 대한 추정치를 통하여 검토할 수 있다. ϕ 값이 ϕ_1 을 1로 하여 $\phi_2 \rightarrow \phi_5$ 로 갈수록 수치가 작아지는 패턴을 통하여 monotonic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각 응답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구분하여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응답자들이 행복에 대한 5점 척도를 순서화하여 인식하고 응답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행복에 대한 SLM(Stereotype Logistic Model) 분석결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특별광역시	-0.749***	0.105
일반시	-0.644***	0.100
연령	-0.329***	0.044
성별	-0.486***	0.082
교육수준	0.235***	0.050
소득수준	0.272***	0.027

15) 순위로지스틱 모형에 대한 “parallel regression assumption”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는 방식은 “A Score Test”와 “A Wald Test”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방식은 총괄적인(omnibus) 방식이어서 모든 독립변수에 대해서 가정이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보여줄 수 없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모든 독립변수나 혹은 몇 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 가정이 성립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다(Long, 1997: 142-143). 이 방법이 Brant가 제시한 검증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가족수	0.028	0.034
정치적 이념	-0.090**	0.038
결혼여부	0.913***	0.118
종교여부	0.463***	0.080
블루칼라	0.079	0.102
화이트칼라	0.063	0.106
지방정부 주거서비스만족도	1.313***	0.083
주거영역 삶의 질	2.117***	0.115
주거상태 삶의 질 높은 집단×서비스만족도	-0.128**	0.052
주거상태 삶의 질 낮은 집단×서비스만족도	0.610***	0.059
ϕ_1	1	.
ϕ_2	0.748***	0.022
ϕ_3	0.711***	0.023
ϕ_4	0.369***	0.014
ϕ_5	0.000	(기준점)
Log likelihood	-14788.806	.
Wald $\chi^2(16)$	1164.06***	.
N	13,491	.

*** $p=0.001$; ** $p=0.05$; * $p=0.01$

변수별로 살펴보면, 행복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되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향성 역시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먼저 지역에 대한 통제변수는 더미변수의 기준점인 군지역에 비해서 특별 및 광역시지역과 일반시 지역을 비교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군지역>일반시(계수=-0.644***)>특별 및 광역시(-0.749***)의 순으로 행복이 높았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던 연령은 높을수록 행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이념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reher & Öhler(2011)의 연구에서 정권의 이념적 성향과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 일치할 때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권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계열적인 비교를 통하여 양자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여러 선행연구(예: Hagerty & Veenhoven, 2003; Tsui, 2014; Veenhoven, 2004 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결과를 지지했으며, 결혼을 한 경우가 미혼이나 이혼, 사별 등의 경우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예: Diener et al., 2000; Layard, 2006; Lucas et al., 2003 등)와 일치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삶의 질이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예: Jakubow, 2014; Sirgy & Tao, & Young, 2008 등). 다만 가족수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이현국·이민아, 2014). 모형에서의 주요 독립변수인 지방정부 주거서비스 만족도 역시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을 지지하였다.

이상의 스테레오타입 로지스틱 분석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대하여 가지는 한계효과를 살펴보았다.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각 변수의 영향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 3>에 나타난 계수를 독립변수의 단위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단위변화로 변환한 값을 의미한다. <표 4>에서는 각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각 응답의 카테고리별로 응답을 할 가능성 내지 확률(probability)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혀 행복하지 않다(y=1)”라는 응답인 경우를 보면, 주거서비스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할 때 해당 응답을 할 확률이 1.2% 감소한다. 또한 “행복하지 않은 편(y=2)”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그 확률을 5.6% 낮추고, “보통(y=3)”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그 확률을 3.4%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편(y=4)”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그 확률을 3.1% 높이고, “매우 행복하다(y=5)”라고 응답한 경우는 그 확률을 7.2%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 관계이지만, 전반적으로 서비스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행복 정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효용의 절대성을 이야기한 빈호벤 등의 주장과 같이, 행복의 영향요인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행복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주요변수별 한계효과

	prob(y=1)	prob(y=2)	prob(y=3)	prob(y=4)	prob(y=5)
주거서비스 만족도	-0.012	-0.056	-0.034	0.031	0.072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집단×주거서비스만족도	0.001	0.005	0.003	-0.003	-0.007
삶의 질 수준이 낮은 집단×주거서비스만족도	-0.006	-0.026	-0.016	0.014	0.033

2. 삶의 질 조절효과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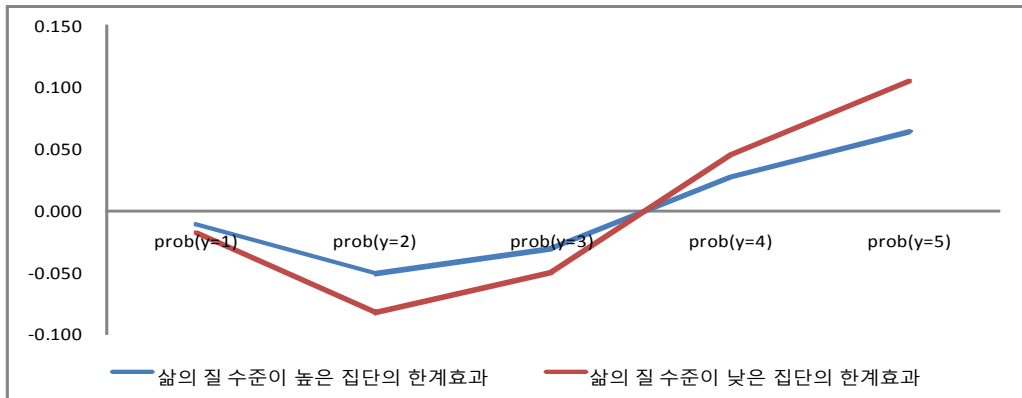
다음, [가설2] 즉 주거 관련 정부서비스 만족도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에 더해 양자의 관계가 주거 관련 삶의 질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절효과의 분석은 행복에 대한 상대적 효용이론에 대한 하나의 검증이 될 수 있다. <표 4>는 주거영역 삶의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여 각 집단 별 주거서비스 만족도의 한계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집단과 주거서비스 만족도와와의 상호작용항과 삶의 질 수준이 낮은 집단과 주거서비스 만족도와와의 상호작용항의 한계효과를 비교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집단과 삶의 질 수준이 낮은 집단의 구분의 근거가 되는 집단은 삶의 질 수준이 보통인 집단이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y=1$)”이라고 응답할 확률에 대해서는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집단이 삶의 질 수준이 보통인 집단에 0.1% 높고, 삶의 질 수준이 낮은 집단은 0.6%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복하지 않은 편($y=2$)”를 응답할 확률에 있어서도 각각 0.5% 높이고, 0.26% 낮춤으로서 주거서비스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할 때 행복하지 않는 쪽으로 갈 확률이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집단이 보통인 집단이나 낮은 집단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행복한 편($y=4$)”을 응답할 확률의 경우에는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 주거서비스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할 때 이를 응답할 확률을 0.3% 낮추고, 삶의 질 수준이 낮은 집단은 1.4%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행복하다($y=5$)”라고 응답할 확률에서는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집단은 보통인 집단에 비해서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할 확률을 0.7% 낮추고, 삶의 질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0.33%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주거서비스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계산하면 <그림 5>와 같다. 이 그래프는 주거영역 삶의 질이 행복과 서비스만족도 사이의 조절작용에 대한 가설 검증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이는 서비스만족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삶의 질 상위 집단에 비해서 하위 집단에서는 덜 행복한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낮아지고, 행복한 쪽으로 갈 확률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주거영역 삶의 질 수준이 주거서비스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가설2 채택]. 이러한 결과는 이스털린 등이 주장한 행복의 영향요인의 효용의 상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대적 효용이론 역시 타당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보여준다.

〈그림 5〉 집단별 주거서비스 만족도의 한계효과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이스털린 등의 상대적 효용이론과 빈호벤 등의 절대적 효용이론 중 어느 이론이 한국 국민들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거 영역에서의 지방정부 서비스와 행복의 관계와 이에 대한 해당 영역 삶의 질 수준의 조절 효과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것과 함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대상 집단의 삶의 질 수준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삶의 질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와 행복 사이의 관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절대적 효용성을 주장한 빈호벤 등의 이론도 주거 영역에서의 정부서비스 만족도와 행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타당할 수 있고, 상대적 효용성을 주장한 이스털린 등의 이론 역시 타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스털린 등과 빈호벤 등의 이론적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자가 공히 타당할 수도 있다는 밝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두 집단 간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양쪽이 공히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을 Graham 등(2010)이 예외적으로 제시한 바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이를 가설적으로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는 또 두 가지 측면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행복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 대하여 정책을 타겟팅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준다. 삶의 질이 낮은 집단을 정책대상으로 삼게 되면 같은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더 클 수 있고, 이러한 논리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서 일종의 한계효용의 법칙과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필요의 정도에 따라서 삶의 질이 더 낮은 상태의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정부개입의 1단위 증가에 대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객관적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시하여 준다. 상대효용이론은 잘못하면 부탄과 같은 나라로 국정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와 어떤 기준(가령, 다른 사람, 과거의 삶, 기대수준 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난하고 억압된 삶을 살면서도 상황에 적응하거나 또는 기대수준을 낮추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상대효용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 충족이 보다 높은 행복을 인도하는 측면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부탄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 스위스나 덴마크와 같이 삶의 질의 객관적 조건을 개선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국정의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주거 영역에 한정하여 이러한 관계를 밝힌 것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득·사회경제적 지위·주거형태 등의 객관적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요인들의 조절효과도 고려해 볼만한 것이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정밀한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가 지니는 단일방법편의(mono-method bias)의 한계를 보다 더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변수 간의 측정 시기를 분리하는(박원우 등, 2007) 등 추가적 방안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명철. (2013a).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

- 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1-30.
- 고명철. (2013b).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지역사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243-270.
- 구재선·김의철. (2006). 심리적 특성, 생활 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18.
- 김병섭. (2010). 「편견과 오류 줄이기」. 서울: 법문사.
- 데릭 보크. (2011).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추홍희(역). 서울: 지안출판사: *The Politics of Happin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 박원우·김미숙·정상명·허규만. (2007).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원인과 해결방안. 「인사·조직연구」, 15(1): 89-133.
- 우창빈. (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51(2): 283-318.
- 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 (2008). 「로짓·프로빗모형 응용」. 서울: 박영사.
- 이영균·김동규.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23-250.
- 이태중·박철민·송건섭. (2000). 지역주민의 ‘삶의 질’ 분석·평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4): 75-92.
- 이태중·이근수·송건섭·이승철. (2005). 광역생활권내 자치단체간 삶의 질 비교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211-229.
- 이현국·이민아. (2014).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한국행정학보」, 48(2): 293-315.
- 조경호·김미숙. (2000). 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 간 삶의 질 만족도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34(3): 27-45.
- 하성규. (1998). 인간다운 생활과 주거권. 「주택보장과 주택정책」, 3(1): 11-34.
- 하혜수. (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0(2): 91-95.
- 허철행·김도엽. (2000). 지방자치체 실시에 따른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12(4): 637-655.
- Anderson, J. A. (1984). Regression and Ordered Categorical Model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s Society*, 46: 1-30.
- Andrew,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 Ball, R., & Chernova, K. (2008). Absolute Income,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8(3): 497-529.
- Borre, O., & Scarbrough, E. (1995). *The Scope of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Brant, R. (1990). Assessing proportionality in the proportional odds model for ordinal logistic regression. *Biometrics*, 46: 1171-1178.
- Campbell, A., Philip, C.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ogburn, J. D., & Schneider, S. K.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Government Performance and Stat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12): 1337-1354.
- Diener, E., Gohm, C. L., Suh, M., & Oishi, S. (2000). Similarity of the relation between marital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 419-436.
- Dolan, P., & Peasgood, T. (2006). Valuing Non-market Goods: Does Subjective Well-being Offer a Viable Alternative to Contingent Valuation. *Imperial College Working Paper*.
- Dreher, A., & Öhler, H. (2011). Does Government Ideology Affect Personal Happiness? A Test. *Economics Letters*, 111: 161-165.
- Duncan, G. (2010). Should Happiness-Maximization Be the Goal of Government?.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2): 163-178.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David, P. A. & M. 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89-125.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_____.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 35-47.
- _____.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Economic Journal*, 111(473): 465-484.
- _____. (2013). Happiness, Growth, and Public Policy. *Economic Inquiry*, 51(1): 1-15.
- Easterlin, R. A., McVey, L. A., Switek, M., Sawangfa, O., & Zweig, J. S. (2011).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ited. *IZA Discussion Paper No. 5799*, 107(52): 22463-22468.
- Easterlin, R. A., & Sawangfa, O. (2010). Happiness and Economic Growth: Does the Cross Section Predict Time Trends?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Diener, J. Helliwell, & D. Kahneman (Ed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ell-being*, 166-21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aham, C., Chattopadhyay, S., & Picon, M. (2010). The Easterlin and Other Paradoxes: Why Both Sides of the Debate May Be Correct. In Diener, J. Helliwell, & D. Kahneman (Ed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ell-being*, 247-28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zeskowiak, S., Sirgy, M. J., & Widger, R. (2003).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Predictors and Outcomes. *Journal of Regional Analysis and Policy*, 33(2): 1-36.
- Hagerty, M. R., & Veenhoven, R.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1-27.
- Heady, B., Veenhoven, R., & Wearing, A. (1991). Top-down versus Bottom-up: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81-100.
- Hirata, J. (2005). How Should Happiness Guide Policy? Why Gross National Happiness is not Opposed to

- Democracy. Paper at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oss national happiness "Rethinking Development: Local Pathways to Global Wellbeing"*.
- Hovik, N. (1992). Using Socioeconomic Indicators and Perceived Quality of Life in Marketing of a Community. In Sirgy M. J., Meadow H. L., Rahts, D., & Samil, A. C.(Ed.). *Development in Quality-of-Life Studies in Marketing*. vol. 4: 128-132. Blacksburg, Virginia: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 Howell, R. T., & Howell, C. J. (2008). The Relation of Economic Status to Subjective Well-being in Developing Countri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4: 536-560.
- Jakubow, A. (2014). State Intervention and Life Satisfaction Reconsidered: The Role of Governance Quality and Resources Misallocation. *Politics & Policy* 42(1): 3-26.
- Layard, R. (2006). Happiness and Public Policy: A Challenge to the Profession. *The Economic Journal*, 116(510): C24-C33.
- Long, J. S.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Sage Publications.
- Lucas, R. (2004). Top-Down and Bottom-Up Models of Life Satisfaction Judgments. Paper at the 6th International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 User Conference.
- Lucas, R., Clark, A., Georgellis, Y. & Diener, Ed. (2003). Reexamining Adaptation and the Set Point Model of Happiness: Reactions to Changes in marital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527-539.
- McBride, M. (2010). Money, happiness, and aspirations: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4: 262-276.
- Meier, K. J. & O'Toole, L. J. (2013). Subjecti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Measurement Error: Common Source Bias and Spurious Relationship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3: 429-456.
- Michalos, A. C., & Zumbo, B. D. (1999). Public Services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8(2): 125-157.
- Mohanty, M. S. (2014). What Determines Happiness? Income or Attitude: Evidence From U.S.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Neuroscience, Psychology, and Economics*. 7(2): 80-102.
- Philips, D. (2006). *Quality of Life-Concept,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 Podsakoff, P. M., & Organ, D. W. (1986). Self-repor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12(4): 531-544.
- Prycker, V. (2010). Happiness on the Political Agenda? PROS and C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5): 585-603.
- Ram, R. (2010). Government Spending and Happiness of the Population: Additional Evidence from Large Cross-country Samples. *Public Choice*, 138: 483-490.

- _____. (2011). Social Capital and Happiness: Additional Cross-Country Evidenc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409-418.
- Simpson, E. H. (1951). The Interpretation of Interaction in Contingency Tabl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13: 238-241.
- Sirgy, M. J., Gao, T., & Young, R. (2008). How Does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Influence Quality of Life (QOL) Outcom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3(2): 81-105.
- Stenner, P. H., Cooper, D., & Skevington, S. M. (2003). Putting the Q into Quality of Life: The Identification of Subjective Construction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Q methodolog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7: 2161-2172.
- Tsui, H. C. (2014). What Affects Happiness: Absolute Income, Relative Income or Expected Income?. *Journal of Policy Modeling*, 36: 994-1007.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 _____. (2004). Happy Life Years: A Measure of Gross National Happiness In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First Seminar on 'Operationalization of Gross National Happiness', Thimphu, hutan: 287-318.
- _____. (2010).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r Number: Is that Possible and Desirabl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605-629.
- Veenhoven, R., & Hagerty, M. R. (2006). Rising Happiness in Nations 1946-2004: A Reply to Easterli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9(3): 421-436.
- Veenhoven, R., & Vergunst, F. (2014). The Easterlin Illusion: Economic Growth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Happiness and Development*, 1(4): 311- 343.
- Wachs, M., Taylor, B. D., Levine, N., & Ong, P. (1993). The Changing Commute: A Case-Study of the Jobs Housing Relationship Over Time. *Urban Studies*, 30(1): 1711-1729.
- Welsch, H. (2009). Implications of Happiness Research for Environmental Economics. *Ecological Economics*, 68: 2735-2742.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Quality of Lif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Satisfaction and Citizens Happiness

Byong-Seob Kim, Hyejin Kang & Hyeonjoung Kim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public service satisfaction on citizen happiness, focusing in particular on the moderating role of residential quality of life. Most studie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of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satisfaction and happiness and hav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possibility that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can differ depending on a citizen's quality of life. This study uses survey data to investigate the hypothesis that the effects of public service satisfaction are not equal among residents with different quality of life. This hypothesis is theoretically derived from the debate between Easterlin's relative utility approach and Veenhoven's absolute utility approach. The results show that citizens with higher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 are happier, on average. In addition,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 was found to be larger for citizens with lower residential quality of life. The latter finding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both theoretical approaches could be ambivalent.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this finding also provides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argument that government policies can be differentiated to enhance the happiness of different target groups.

【Keywords: happiness, quality of life, local service satisfaction, relative utility approach, absolute utility approach, stereotype logistic】